

얼어붙은 벤처투자... 10.5조 추가 지원해 되살린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특별 대출 마련 민간 투자 유도... 복수의결권 도입·출자 한도 2배 확대 등 제도 개선

정부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벤처 투자에 정책자금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및 벤처 캐피탈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벤처기업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벤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R&D 투자에 4.7조원 투자=20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금융위와 중기부는 벤처·스타

트업 업계에 정책금융(보증·융자) 2조2000억원, 정책 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벤처기업에 29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투입한다고 발표한 뒤 3개월만의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은 성장 자금 조달, 중기 성장 기업(3-7년)은 후속 투자 유치, 후기 성장기업(7년 이후)은 성장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 등에 예로를 겪고 있다.

이에 창업 초기 성장 단계 회사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

가 공급하기로 했다.

투자 소외 영역인 엔젤투자 및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투자를 600억원 확대하고,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12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올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중기 성장 단계 회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3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를 기존 만기 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3배 증가한 1조5000억원으로 확대,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5700억원을 투입한다.

후기 성장 단계 회사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M&A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가칭)를 신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

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은행 등 민간투자 유도...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복수의결권 도입=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자기자본의 0.5→1%) 확대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M&A 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현재 40% 이상)를 폐지하고, 상장사 투자 규제(현재 최대 20%)도 없앤다.

벤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

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가격 중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정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 확인 시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9일 농촌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에 참여한 광주농협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촌과 함께” 농협 광주본부, 농촌봉사단 영농 발대식

행사 후 농촌 일손돕기 진행 대학생들과 재능기부 협약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자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농협 앞에서 범 광주농협 '함께하는 농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농지원 발대식 행사는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 제고와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체 등 일손지원 참여주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동시 개최됐다.

발대식 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임이업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남택

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 등을 비롯한 범 농협 임직원과 동신대학생 자원봉사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광주본부는 발대식 행사에서 영농지원에 사용될 농기계 14대를 지역농협에 전달했으며, 영농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농집중철 매주 1회 '함께하는 농촌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발대식 행사 후 동곡, 평동, 임곡 지역으로 나눠 옥수수 심기, 고춧대 세우기, 딸기 손지기 등의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농협 광주본부와 동신대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들의 농촌일손돕기와 재능기부봉사 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해 지역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협광주본부는 범 농협 임직원 농촌봉사활동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에 영농인력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농촌지역 안정적인 일손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본부는 올해 3만 5000명의 농촌인력증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인자리 참여자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지역본부 또는 인력증개센터 운영농협인 대촌농협과 평동농협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영그룹,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 아파트 지원

강릉 21세대·동해 15세대 등

부영그룹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아파트 36세대를 지원했다.

부영그룹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강릉 21세대, 동해 15세대 등 36세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당사는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회사보유분으로 갖고 있는 임

대 아파트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영그룹은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지원과 성금을 기탁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피해, 2019년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부영아파트를 지원하고 2022년에는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를 위한 부영 아파트와 성금 5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밖에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설명회

광주·전남 중기 임원 등 150명 참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고용노동청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광주고용노동청의 2023년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 후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